



올해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이 완료되어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2013년부터 적용될 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만 다가올 미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가 전망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노인 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보장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계획으로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왔으며, 이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시안”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지식과 통찰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여성가족부 장관 김 금 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진행 :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14:00~ 개 회

14:00~14:20 인사말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사회 : 김용화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14:20~14:50 발 표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50~15:00 휴 식

15:00~16:30 토 론 •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병창 (숙대 법학과 교수)
•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 조혜영 (여성신문사 편집국장)

16:3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발 표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1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문 47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49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 53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5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57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 61

조혜영 (여성신문사 편집국장) / 67




발 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김 영 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ntents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의의	5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7
3.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과 대응	7
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8
5.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12
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12
 부록 1. 정책과제 일람표	18
부록 2. 정책과제별 성과지표	31
부록 3. 정책과제별 주관부서	40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의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¹⁾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수립·시행되어 왔으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새 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15년이 흐르면서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의 금지 및 적극적 고용조치의 시행,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금지법 등 법·제도의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성급한 견해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를 조망하면 여성정책기본계획에게 부여된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가 전망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계획으로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갖는 의미가 더욱 커진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될 때는 ‘취약여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성평등의 추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여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들의 젠더함의를 찾고, 인력개발 및 고용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여성정책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이 역할은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추이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기후변화와 거대한 자연재해 등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장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 때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연계되고 중층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개별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남녀의 역할과 지위를 의미하는 젠더관계가 특정 영역의 개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고유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표면적으로는 그 프로그램들과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교차이슈를 항상 고려하는 소위 주류화(mainstreaming)가 필요하다. 젠더관계를 교차이슈로 고려하여 개별 정책에서 젠더의 함의를 찾고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동법 제8조)하여야 함.

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젠더의제가 교차이슈로 작동함에 따라 고유정책과의 관계설정 및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상한다. <표 I-1>과 같이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온 15년 동안 본 계획 이외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의 이해에 직결되는 기본계획이 10여개에 이른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므로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성별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및 실행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과 관련될 뿐 아니라 여성과 무관해 보이는 각종 정책과 기본계획들이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갖추서 목표로 하는 결과를 산출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특정 영역의(sector specific) 정책 수립 및 운용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내의 각종 기본계획들과의 연계하되,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1〉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 기본계획들

제1차 기본계획('98-'02)	제2차 기본계획('03-'07)	제3차 기본계획('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98-'02) •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01-'05) •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1999년 이래 매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3-'07) •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08-'12) • 제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기본계획('04-'08) • 제1차 건강가족기본계획('06-'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새싹플랜('06-'08) •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기본계획('09-'13) •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11-'15)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 •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아이사랑플랜('09-'12) •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11-'15) •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10-'14)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10-'12)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성과〉

- ▶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새로운 정책집단의 설정 등 여성취업 지원
- ▶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대책의 강구
- ▶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 ▶ 취약집단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경주
-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과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 ▶ ‘여성친화도시’를 통한 새 지역여성정책거버넌스 모형 시도

〈한계〉

- ▶ 여성고용률 정체 등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지체
- ▶ 성별고정관념의 유지로 반쪽짜리 일가정양립지원 성과
- ▶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
- ▶ 남녀차별 구제 및 예방과 성희롱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약화
- ▶ 문화미디어 정책영역의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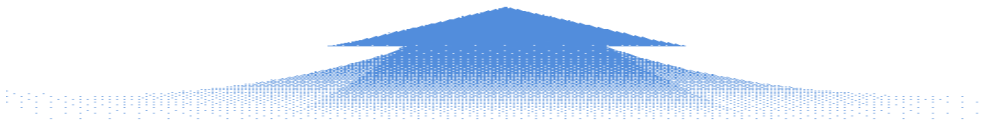
3.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과 대응

- ▶ 초저출산·고령화와 가족의 변화
- ▶ 여성의 취업욕구 확대와 노동공급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정책 필요
- ▶ 성폭력 예방 등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 ▶ 공공부문과 대외협력에서 여성의 대표성 보장
- ▶ 평등문화 수용자 집단의 다양화
- ▶ 여성정책 거버넌스 방식의 변화

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함께 성장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사회



목표

여성 일자리와
대표성 확보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돌봄의 공유와
사회화

성별 고정관념의
해소

전략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확산
여성정책의 책무성 강화

정책과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공공부문· 대외 협력의 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실현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의 강화
---------------------	-----------------------------	---------------------------	-----------------------	-------------------------	-----------------	-----------------------

가. 비전

□ 함께 성장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사회

-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평등의 추구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으로 승인함.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평등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성평등을 남녀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지하여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도 나타남.
-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격차지수와 UNDP의 젠더권한지수 등에서의 국가순위가 하위권임에도 성평등은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퍼져, 성평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말 걸어야 할지 난감할 뿐 아니라 성 불평등한 현상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도 종종 발생함.
- 제4차 계획기간에는 성평등의 가치를 새롭게 확산시킴으로써 성평등 사회가 양성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개성으로 존중받으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임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
- 성평등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이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사회임. 4차 계획기간에는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구조 변화’의 지향성을 보다 강화하여 여성정책이 실질적인 젠더정책으로 이동하여 명실상부한 성평등의 가치가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

나. 목표

□ 목표 1 : 여성의 일자리와 대표성 확보

- 남성에 비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체된 경제활동,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확립하여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목표 2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목표 3 : 돌봄의 공유와 사회화

- 일차적으로 여성과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던 돌봄 노동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남성의 돌봄권을 보장하여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4 : 성별 고정관념의 해소

-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극복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

다. 전략

□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확산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명시적으로 도입된 성 주류화 전략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사라짐. 전통적인 여성정책 영역뿐 아니라 인력개발 및 고용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전략은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추이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기후변화와 거대한 자연재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속되어야 할 것임. 4차 계획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정책대응을 필요로 하므로, 개별정책(sector)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임.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배태되기 시작한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구조 변화’의 지향성을 향후에는 보다 더 전면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제3차 계획까지의 방향설정이 ‘여성’ 고유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건 상태에서 양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제4차 기본계획은 남녀 간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와 국가 정책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투영·실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이 방향과 기준에 맞는 정책의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정책의 기획, 입안, 시행, 평가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수립, 성별분리통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의 정착과 실효성을 강화함.

□ 여성정책의 책무성 강화

- 동 기본계획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정책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여성정책 조정능력’을 높여야 할 것임. 젠더의제가 교차이슈로 작동하므로 개별 부처가 젠더 함의를 찾고 대응해 가도록 촉진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기 때문임.
- 이에 중앙부처 내 정책 조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 목표가 정부 부처의 제반 정책에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함. 현재 중앙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한 공식기구로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2012년 7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7번 열렸고 그 중 2번을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개최되었음.
- 기존의 심의안건이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등에 머물렀는데,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관련부처의 성평등 지표 달성 등 심의의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함.
- 다음으로 ‘지표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향후 5년은 지난 15년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므로 제4차 기본계획기간에는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①여성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향상, 여성안전 등을 달성하는데 정확한 정책아젠다의 도출 ②거브너스 등을 활용한 정책추진방식의 다양화 ③대표지표 관리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함.
- 이중 대표지표 관리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위한 전략 2010~2015년”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평등 지표 및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지수 등을 참고

5.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7대 분야의 30개 중과제 및 110개 소과제로 구성됨. 7대 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공공부문·대외협력의 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실현,”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의 강화”임.
- 이와 같은 계획구조는 두가지 노력의 산물임. 첫째,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함. 둘째, 지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성과가 미진한 과제들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근거 법제와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지표 관리방안을 제시함.

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가. 여성 일자리-인권정책의 강화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 3차 기본계획과 달리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보다 촘촘하게 구분하였음. 특히 경력단절의 기간에 대한 고려, 초기 연소노인 등 최근 사회변화와 인구변화를 고려하였음.
- 정책대상의 확대 및 제도환경 변화 반영: 귀농귀촌 여성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정책대상을 확대.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새로운 법제도의 환경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음.
- 노동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대상과 분야를 확대: 기존의 정책의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본 계획에서는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음. 여성 인력활용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공급자 중심의 정책지원은 한계를 갖기 때문임. 아울러 제도와 환경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집중하였음.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인권 보호” 대폭 강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라는 2개의 중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제4차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인권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 재정립’ 등을 신규로 포함하여 총5개의 중과제로 구성함.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개별과제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폭력방지정책의 방향과 요구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임. 그렇지만 ‘피해자 지원체계의 내실화’, ‘가해자 처벌제도의 집행력 강화’ 및 ‘2차 피해방지’를 공통의 소과제로 포함시켰음.
- ‘여성인권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관련 피해자 지원체계 총괄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음.

나. 새 정책영역의 부각

▶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 복지관련 정책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권익보호’ 영역 내의 하위과제로 설정되어, 적극적인 ‘권리’가 아닌 ‘보호’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었음.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가족형태별 기초생활보장체계 수립, 근로연계복지제도간 연계성 강화 등을 새로 제안함.
-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였음.
- 또한 여성건강이슈로 모성건강만을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였음.

▶ “통일 등 대외협력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별도 과제로 부각

-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과제에 더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남북한 여성교류 확대와 관련된 과제들이 별도과제로 부각하였음.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과제는 유엔 차원의 결의를 우리

나라가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됨.

다. 다양한 정책고객의 포함

▶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같이 묶음

-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돌봄지원 과제와 같이 묶음으로써 정책대상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임을 명확히 함. 남성의 양육권을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돌봄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제도와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과제를 제안함.
- 또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그간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돌봄지원에 대해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여 보완, 체계화에 초점을 둠. 보육 및 아이돌봄정책,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등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음. 또한 3차 기간동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데에 대응하여 기존의 가족유형별 지원 확충과 더불어 새로운 가족유형에 대한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임.

▶ 평등문화와 교육 확산을 위한 과제 개발

- 우리 사회는 집약성장과정을 통과하면서 ‘피로사회’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 성공시대의 남성모델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미시적 움직임을 지원하고자 함. 기존의 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돌봄의 공유와 사회화를 위한 풀뿌리 여성운동 및 지역운동과의 결합을 통한 방식을 추구함.
- 과도한 성형과 다이어트, 외모 중심, 왜곡된 성의식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한편 제3차 여성정책에서는 여성교육분야의 과제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나 성평등한 교육환경의 달성을 위한 과제가 산적함. 이에 본 4차 계획에서는 ① 교육과정, 교원정책, 양성평등 교육, 학교에서의 성교육 등의 정책들을 향후 여건전망에 맞게 재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② 그동안 제안된 적이 없었던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를(대학운영 방식, 안전문제, 대표성 제고 등) 제안하였고, ③ 학업중단 청소년, 유자녀 대학원생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대상을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함.

- 또한 교육통계연보에 지표 삽입, 교원능력평가제와의 연동, 각종 대학평가 및 사업 심사 지표에 삽입, 대학정보공시 성별분리통계 제시 등 교육분야의 여성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강화함.

▶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이슈 개발

- 4차 기본계획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함. 경직된 성역할은 남녀 모두의 잠재력과 선택을 제한함.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성역할을 촉진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 기회와 선택의 폭을 보장하게 됨.
-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이슈는 육아와 돌봄에의 남성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에서부터 남성들에게 도전과제인 문맹율, 중퇴, 직업보전, 건강 등에서의 성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까지 포괄함. 특히 자녀양육에 남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의 이쿠멘, 스웨덴의 프렌디 등의 용어 개발 등을 통해 대중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성까지 고려함.

[박스] 북구에서의 남성과 성평등 관련 이슈들

- 핀란드를 필두로 한 북구 유럽 국가들은 성평등 사회 실현에 있어 남성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젠더 전략에 파트너이며 협력자로 남성을 상정함. “이는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여성정책의 한계를 넘어 남성과 여성, 나아가 다양한 집단이 공히 참여하는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실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EU Community Framework Strategy on Gender Equality(2001-2005)의 5가지 영역의 목표 중 3영역 여성과 남성의 사회권접근과 혜택의 평등(social rights)으로 정하고, 하위 operational objective로 1. 사회적 영역(부모 휴가, 모성 보호, 노동 시간, 파트 타임)에서 지식을 개선하고 관련 위원회 법의 모니터, 2. 여성과 남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교통, 의료, 대외관계, 인권 등)에 젠더 관점의 통합(주류화) 포함함.
- 핀란드에서 남성과 젠더 이슈에 관한 유의미한 조치는 젠더 평등 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가 남성과 젠더 평등 소위원회를 처음 만단 1988년에 이루어졌고, 국제적으로는 2006년 EU 논의에 남성과 젠더 평등의 주제에 관해 핀란드의 성과를 소개하였음. 핀란드 정부는 남성과 젠더 평등이라는 주제는 “3가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첫째, 남성은 젠더 평등 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둘째, 성주류화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모두의 관점에서 출발한 계획된 실행의 평가(assessment of planned action)가 요구되며, 셋째, 남성들이 직면한 몇몇 문제는 젠더 평등 정책과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1: 18)”을 강조함.
- 핀란드와 다른 서구국가들에서 논의되는 남성과 젠더 평등의 주제에 연계된 잘 알려진 5가지 주제(five well-known topics)는 첫째, 남성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그리고 남성의 부모임(men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nd male parenthood), 둘째,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by men(특히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셋째, 남성들과 건강, 넷째, 남성들과 이혼, 다섯째, 소년들과 학교에 관한 젠더 평등 정책이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 2007). 오스트리아의 남성과 젠더 평등 정책은 구체적으로 이혼한 남성과 아이들을 위한 ‘visiting cafes’, 예방적 보건(preventive health care)에 초점을 둔 남성 건강에 관한 연구, 아버지됨(fatherhood)에 초점을 둔 청년들 간의 가족 기능(family competence among youth)과 긍정적 아버지상과 남성 정체성(positive fatherhood and male identity) 등이 실행되고 있다(Johannes Berchtold, 2006).²⁾

2)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06). *Men and Gender Equality - Conference Report*.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

라. 정책관리 수단의 확보 및 젠더 거버넌스 강화

▶ 여성정책조정기능의 강화 및 지표관리 등

- 기본계획내 정책과제들의 달성 여부와 진전도를 평가 또는 점검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함. 특정 과제에 대해서는 성평등 지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정책 추진의 엄밀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여성정책조정기구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한 과제를 새로 포함시킴.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의 ‘내실화’에 집중

- 이제까지 양적 확대 성과에 대해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제도화된 것들이 실효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내실화’에 초점을 둬, “성인지 정책 도구 간의 연계”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간의 연계를 모색함.

▶ 시민과 직접 소통의 강화

- 4차 계획에서는 정책에 시민참여를 강화 및 시민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과제를 처음으로 별도 설정함. 4차 계획을 수립하는 지금은 시민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여러 매체가 발달해있고, 시민들의 역시 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가 성숙해있음.
- “정부·시민단체·전문가 연석회의 구성 및 활성화”, “정책 이슈별 시민공청회의 활성화”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로 제시함.

부록 1. 정책과제 일람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 (activation) 지원	1-1-1 청년층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 확장을 통한 고졸 여성 취업 지원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참여 대학 및 예산지원 확대 ▪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유도 및 이탈 방지 ▪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1-1-2 초기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경력단절 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실시
	1-1-3 40대 중심의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규모 확대 ▪ 새로일하기 사업 평가지표 개선 ▪ “여성과학기술인 리더너” 사업 확대
	1-1-4 여성 연소노인 취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연소노인 직업역량 강화사업
	1-1-5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미래 희망직종 개발” 사업 실시 ▪ [중점] “구인수요 정보제공” 사업 실시 ▪ 지역별 업종별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사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소 및 기업내 직장보육시설 확대 및 육아지원
1-2 사회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성차별개선	1-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중점] 비정규직 모성보호 개선 모성보호 이후 고용 모니터링
	1-2-2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기업의 업무배치와 승진모니터링 강화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성과 평가개선과 사후조치 강화
	1-2-3 기업내 차별 개선 모니터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성차별 구제업무 결과 모니터링 사업
1-3 취약여성 자립지원 강화	1-3-1 빈곤층 여성 고용-복지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가장· 한부모 통합지원센터 ▪ 빈곤층 여성 활성화 지원사업 ▪ 다문화·북한이탈 주민 통합지원 사업
	1-3-2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의 경영능력 훈련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업인 경영성공사례 발굴 ▪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 교육 확대 ▪ [신규] 농촌 비농업 종사 여성 취업지원 사업
	1-3-3 여성 비정규직 활용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신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복지기금 설립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1-3-4 노동시장 성차별 지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 [중점][신규] 성 평등 지표개선 모니터링 센터 설치
1-4 여성 협동조합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 기반 구축	1-4-1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확대	▪ [중점][신규] 돌봄 협동조합 등 지원 강화
	1-4-2 여성창업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금융지원 할당제 실시 ▪ 지식창업 및 1인 창업의 여성참여 확대 ▪ 취약계층 여성창업 지원 확대

2

공공부문·대외협력의 참여 확대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2-1 (중점)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구축	2-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의석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출직 의원 후보 의무할당 법제화 비례대표 여성의원 비율 제고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후보 및 의석수 확대 논리개발 연구
	2-1-2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신규] 여성정치후보자 및 실무인력 육성과 발굴
	2-1-3 성평등한 정치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성평등한 정치문화 수준 향상교육 확대 [신규] 성평등한 국회조성을 위한 제도도입
2-2 공공부문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2-1 여성 공무원 관리직 진출 및 임용목표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보직 참여기회 확대 자기계발형 보직순환제 및 보직기간 제한제 실시 맞춤형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적용 확대
	2-2-2 공공기관 관리직 및 임원비율 제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신규] 공기업 임원진(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등)의 단계별 목표제 추진 [중점][신규] 공기업 경영평가에 균형인사지표 포함: 리더십 및 책임경영 평가의 하위범주로 포함시킴 [중점][신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규정 개정 및 여성 위원 40% 위촉(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개선) [중점][신규] 여성임원 육성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용
	2-2-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위원회 여성목표비율 재설정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풀 확대 및 정비 운영
	2-2-4 대학의 여교수 임용 비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조치’의 실효성 제고 [신규]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조치 기본계획’(가제) 추진 [중점][신규] 대학 평가 및 사업의 선정 심사 시 여교수 임용 비율 등 젠더 관련 지표를 삽입
	2-2-5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여학생 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신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여학생 정원 비율 30%까지 확대 조치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내 여학생-졸업생 간 멘토링 체계 구축
2-3 (신규)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2-3-1 통일 관련 의사결정과정 여성의 참여 보장 및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신규] 통일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및 각종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 [중점][신규]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중점][신규] 통일 대비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활성화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2-3-2 남북관계 3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남북교류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에서 성평등 조항 포함
	2-3-3 남북여성 공동의제발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남북 여성 공동의제 발굴 기반 강화 ▪ [신규] 통일 대비 남북한 여성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의제 개발 민관협의 시스템 구축
	2-3-4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남북한 대치상황, 향후 분쟁지역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제공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신규] 정부부처사이에서 1325 이행을 위한 조정, 감독, 보고 기능 수행 ▪ [신규] 국민에 대한 1325호의 교육, 홍보 ▪ [신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성별 통계 작성, 보고 ▪ [신규] 한국군의 현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위한 여성, 여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젠더 교육 확대 ▪ [신규] 평화·통일·외교분야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
2-4 국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기구내 여성참여 보장	2-4-1 젠더마커에 의한 개발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ODA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젠더마커에 의한 성평등 달성기여도 평가 ▪ [신규] 국내기업 및 민간부문과 시민사회가 함께 국제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4-2 국제협력기구내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및 각종 국제기구내 일정비율의 여성참여 보장
	2-4-3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 주요 국제협약 이행 및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 [신규] Post-MDGs에 대한 정책 대응 ▪ [신규] 관련부처와 국내 여성단체, 국제 여성단체, 연구 및 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3-1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3-1-1 지역사회 안전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아동안전을 위한 성인대상 교육 운영 ▪ [신규] 여성아동안전 관련 기관종사자 대상 여성인권 및 안전교육 확대
	3-1-2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인권교육 확대 ▪ [신규]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신규] 통합적 인권교육 모니터링 실시 ▪ [신규] 여성아동안전교육 및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기구 설치
	3-1-3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미디어 활용 전략 마련 ▪ [신규] 여성에 대한 폭력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실시
	3-1-4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1인가구 등 지역사회내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안전체계 구축 ▪ [신규] 지역단위 안전지수 개발·발표 ▪ [신규] 아동안전에 위한 지역돌봄 안전망 강 ▪ [신규] 여성아동안전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네트워크 운영 강화
	3-1-5 성희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방지조치 마련 ▪ 성희롱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집행의 활성화
	3-1-6 여성안전에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지역연대 운영 기반 강화 ▪ [중점][신규] 지역연대 사업 다각화
	3-1-7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아동안전학교 확대 실시 ▪ [신규] 교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학교별 의무 보고 시스템 강화 및 교육통계연보를 통한 통계 축적 ▪ [신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성 인지적 성교육 연수 확대 ▪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및 안전지대 구축 ▪ [신규]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성희롱·성폭력센터 연대 및 전국 협의체 활동 지원
3-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3-2-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자립·자활지원 강화 ▪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 ▪ [중점][신규] 피해자 지원체계의 재편 추진 ▪ 종사자의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 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처우 개선
	3-2-2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제도의 집행력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가정폭력방지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신규] 가정폭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 [신규]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3-2-3 가정폭력 피해감소를 위한 사법절차 이전단계에서의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쉼터 설치 및 교육 의무화 ▪ [중점][신규] 음주와 가정폭력 공존문제 인식 및 관련 체계 도입
3-3 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3-3-1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피해자 지원체계의 재편 추진 ▪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 ▪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3-2 성폭력가해자 처벌제도의 집행력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인식확산을 위한 법 개정 ▪ 성폭력 처벌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중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집행력 강화
	3-3-3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관련 사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교육 운영체계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교육 시행을 위한 부처간 연계체계 구축 ▪ [신규] 재범방지교육 시행 등에 따른 성폭력가해자 재범에 관한 평가체계 도입
3-4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3-4-1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에 대한 단속·처벌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중점][신규]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 규정 삭제 ▪ [신규] 존스쿨제도 개선
	3-4-2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의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 범위확장을 위한 법 개정 ▪ 성매매피해자 통합적 사례관리체계 구축 ▪ [중점][신규] 집결지역 및 유흥업소·신변중요업소 관련 성매매근절정책 개발 ▪ [신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 [신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신변안전 확보
	3-4-3 청소년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성매매 유형별 대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매매 단속·처벌 강화 및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활성화 ▪ 해외 성매매 단속·처벌 강화 및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마련
3-5 여성인권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 재정립	3-5-1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제 정비 ▪ [신규] 여성폭력관련 피해자 지원체계 총괄기구 설치
	3-5-2 여성폭력방지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여성폭력방지 국가통계체계 구축 ▪ [신규] 여성폭력통계센터 설치
	3-5-3 여성폭력방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여성폭력방지 예산평가 및 안정성 확보
	3-5-4 여성폭력방지정책 과정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각종 점검단 운영에 관한 상시 점검

4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4-1 공적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4-1-1 국민연금의 여성친화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임의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중점] 첫째자녀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적용 및 돌봄 노동에 대한 크레딧 도입 ▪ [신규] 유족연금의 최저기준 마련
	4-1-2 여성의 기초노령연금 및 타공적연금 수급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보장성 강화 ▪ [중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서의 분할연금제도 도입
4-2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과 위기개입 강화	4-2-1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여성친화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인정기준 명확화 ▪ [중점] 가족형태별 급여체계 도입방안 검토
	4-2-2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 [중점] 각종 근로연계복지제도 간 연계성 강화
4-3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3-1 여성노인의 활동적 노후생활 및 취약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 여성노인 맞춤형 재무, 여가, 생활, 취업, 건강 등 노후설계·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 중고령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개발·운영 ▪ 독거여성노인의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4-3-2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및 직업사회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요구분석 및 맞춤형 지원
	4-3-3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양육 지원
	4-3-4 여성수용자 인권보호 및 출소자의 자립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수용자의 성폭력방지 및 모성권보호 강화 ▪ 여성수용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강화
4-4 여성의 건강권 증진	4-4-1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건강마을 시범운영 ▪ [신규] 여성건강 관련 연구수행 지원 및 여성건강 실태조사 실시
	4-4-2 모성 및 생식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산전후 의료관리 지원 강화 ▪ [신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시범운영 ▪ [중점]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중점] 피임교육의 공식화 및 양성평등 성교육 확산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논의 확산
	4-4-3 여성의 기초체력강화 및 건강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 [신규] 공공생활체육시설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의 연령조정

5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실현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5-1 보육지원의 체계화	5-1-1 보육수요에 맞는 전달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 실수요자를 위한 우선순위 기준 정비 및 실효성 강화
	5-1-2 보육서비스의 지역격차해소 및 서비스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부모부담 완화 ▪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보육정보센터의 확충을 통한 지역간 서비스 격차 완화
	5-1-3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강화 ▪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 방과후보육 공급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 ▪ [신규] 민간베이비시터 관리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5-2 각종 돌봄지원의 사회적 분담 강화	5-2-1 장기요양보험 공급규제 강화 및 질적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국공립 요양보험기관 비중 확대 ▪ [신규] 요양인력 임금가이드라인 제공 및 하한선 마련
	5-2-2 돌봄서비스의 관리감독 강화 및 체계적 정보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강화 ▪ [신규] 돌봄서비스 원스탑 정보망 구축, 운영
	5-2-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무급가족돌봄자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5-3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5-3-1 한부모가족지원의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급여의 개념 재정비 및 아동양육비의 현실화 ▪ [중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 재가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정보전달체계 구축
	5-3-2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 확대 및 가족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 제고 지원 ▪ [신규]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적합형 일자리 발굴 ▪ 결혼이민자의 언어적 특수성에 대한 긍정적 가족환경 조성
	5-3-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구적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파악 및 안심지역 설치·운영 ▪ [신규] 저소득 청년여성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형 소형 임대주택 보급 ▪ [중점] 혈연과 혼인 이외 생활동반가족 실태 및 지원 대책 조사 연구
5-4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반구축	5-4-1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개선사업 ▪ [신규] 근로시간대 조정을 위한 근로형태 발굴사업 ▪ [신규] 여성다수업종의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법률 개정 ▪ 단시간근로청구권의 확산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5-4-2 유연근로제도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공기관의 의무적 유연근로제 실시 ▪ 유연근로제 유형별 인사관리매뉴얼 개발
	5-4-3 남성의 육아참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의 남성할당
	5-4-4 근로자 지원제도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맞춤형 EAP 실시
	5-4-5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가족친화인증의 지자체 평가 반영 ▪ [신규] 가족친화인증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연계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6-1 여성이 건강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6-1-1 여성건강 위협하는 미디어 및 사회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장의료광고 규제 [중점] 여성건강 유해분야 산업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제한 이력서에 옹모차별 초래 항목 기재 제한
	6-1-2 아동 및 청소년의 자존감을 살리는 신체 이미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신규]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식이장애 청소년 재활 지원 [신규] 학교 및 학교 밖 여아의 건강한 신체관리프로그램 및 안전한 활동 공간 제공
	6-1-3 의료서비스 인력의 여성인권 감수성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형수술시 의료진 설명의무 준수 [신규] 의료인 대상, 여성인권교육 강화 [신규] 의료인 대상,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고양
6-2 차별없는 미디어·문화예술 환경 조성	6-2-1 미디어생태계 성평등 체감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권과 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공익광고 성차별, 여성비하, 폭력 조장하는 미디어를 신고하는 신문고 운영 매체 환경 개선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 반영 환류체계 구축 이용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터넷광고자율심의 기구 활동 지원 미디어 정책연구,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지표 개발
	6-2-2 성평등 문화를 키우는 미디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작은 미디어 운영 및 제작 지원 미디어용 여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성평등콘텐츠 제작, 지상파 재허가시 가산점 및 제작자 인센티브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 공모
	6-2-3 여성연예인 인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가칭)예술인복지법 제정 및 표준계약서 현실화 [신규]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인권교육 실시 연예 매니지먼트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 교육 의무화 E-6 비자 여성노동자 고용실태 조사 및 감독
	6-2-4 정보 접근성과 정보역량의 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SNS 사용의 성별 차이 연구 및 대책 취약여성의 정보접근성과 역량 제고
6-3 지속가능한 삶 속의 풀뿌리문화 살리기	6-3-1 풀뿌리문화 여성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지역기반 대안경제영역의 여성활동 지원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동 육성 지역 풀뿌리 여성단체 성장 지원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6-3-2 성평등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마을공동체 모델 지원 ▪ [중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지역운동 네트워크 지원 ▪ [신규] 가족단위의 생태문화활동 지원
	6-3-3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명절, 결혼, 육아 및 교육, 회식 등) 개선운동 ▪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포럼 운영 ▪ [중점] 아동, 청소년 수련시설, 평등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6-3-4 성평등한 지역문화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 활동 지원
6-4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6-4-1 양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및 성 평등한 학교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교육과학기술부 내 양성평등 전담 조직 확보 ▪ 시도교육청에 양성평등교육 전담인력 1인 이상 확보 ▪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학교 의무 시행 및 공동 협의체 구성·운영 ▪ [신규] 개별학교의 양성평등 자체진단 결과 분석 및 우수학교 포상
	6-4-2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비한 성 평등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성 평등한 학교 교육과정의 확립 ▪ [중점][신규] 교육통계연보에 고등학교 남녀학생의 선택교과 현황 항목 삽입 ▪ 교과서 집필과정에서의 성 평등 기준 확립 ▪ [신규] 교과서의 성 차별적 교육내용의 지속적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6-4-3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평가영역으로 양성평등 문항 삽입 ▪ [신규]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신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원연수의 실효성 제고
	6-4-4 양성평등한 대학 운영 제고 및 대학정보공시에 성별분리 통계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대학의 양성평등 학교 운영 책무성 제고 ▪ [중점][신규] 대학정보공시 모든 현황 지표에 성별 분리 통계 제시
	6-4-5 학습 취약 계층을 위한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교육지원 강화 ▪ [신규] 유자녀 대학(원)생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혜택 ▪ [신규] 저학력·저소득 여성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7-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7-1-1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으로서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7-1-2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강화
	7-1-3 중앙과 지역 여성정책 협력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역 여성정책 협의 기구 활성화 ▪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체계화 ▪ 지방정부 여성정책 정부합동 평가 운영 개선
	7-1-4 성평등 목표 설정 및 성인지적 정부업무평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기관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신규] 중앙정부 정부업무평가의 성인지적 개선 ▪ 지방자치단체 정부업무평가의 성인지적 개선
	7-1-5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표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표 활용 모듈 구성 및 평가 체계 마련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표 DB구축 및 홍보 강화
7-2 성인지 정책 도구의 내실화	7-2-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특성화와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 [신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식의 특성화 및 다양화 ▪ [신규] 중앙부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성화 ▪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주제별 관리 ▪ [신규] 정책개선 실적 공표제도 도입 및 정보공개 강화
	7-2-2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성인지 예산 제도 정비 ▪ [중점][신규] 심층 성인지 예산 분석의 도입 ▪ [신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신규]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7-2-3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및 이행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 ▪ [중점][신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및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여성친화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7-2-4 성인지 정책 도구 간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성인지 정책 추진 기구 간 협의체 설치 ▪ [중점][신규] 기관별 성인지 정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신규] 연계 절차 및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
	7-2-5 양질의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기관별 성인지 통계생산·점검체계 구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 [신규] 국가 성인지통계품질진단사업 실시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7-2-6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통합적 지원기관으로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성인지 정책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역할 및 체계 정립 ▪ [중점][신규]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
7-3 성평등 정책 추진 주체 역량강화 및 협력구축	7-3-1 고위직 공무원의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직 및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 [신규] 장·차관 직무 평가에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포함
	7-3-2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대상 확대 및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확대 ▪ [신규] 정책 업무에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우수사례 표창자 동료 교육 전문가로 양성 ▪ 여성정책담당부서 및 성인지 정책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7-3-3 성인지 교육 및 자문 전문 인력 양성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신규] 성인지 교육 전문 강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중점][신규] 성인지 정책 컨설턴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성인지 교육 교재 개발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 [신규]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을 통한 인력 양성
	7-3-4 시민단체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정부·시민단체·전문가 연석회의 구성 및 활성화 ▪ 여성단체공동협력 사업의 확대 및 추진체계 개선 ▪ [신규] 성인지 정책 젠더 거버넌스 강화
7-4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공감 확대	7-4-1 성평등 정책의 시민 참여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성불평등 정책 개선 건의 센터 운영 ▪ [중점][신규] 정책 이슈별 시민공청회의 활성화 ▪ [신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논문 성평등 사회 논문 공모
	7-4-1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정책 홍보 자료 발행 ▪ [신규] 성 인지 정책 개선 사례 대중적 체감도 향상

부록 2. 정책과제별 성과지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과지표	출처 및 산식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activation) 지원	
1-1-1. 청년층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지원 강화	
전문계고 졸업 여학생 취업안내 건수 새일센터의 전문계고 졸업생 지원 건수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수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건수 청년층 창업지원 수혜건수 여성 비전통분야 성공사례 홍보 건수 공학분야 여교수 비율 공과대학 여학생 편의시설 설치 건수 청년 창업지원건수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청 통계자료
1-1-2. 초기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경력단절 5년 미만 여성들의 취업지원 수혜율 2030 취업지원센터 개소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1-1-3. 40대 중심의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업 개선	
새로일하기 센터 수 증가율 예산 증가율 새일센터 평가지표 개선 여부 취업설계사 인건비 증가율, 이직률 여성과학기술인 리더너 사업 수혜자 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통계자료
1-1-4. 여성 연소노인 취업지원 사업	
여성 중고령자 취업훈련 참여율, 중고령자 여성 대상 신직종 개발 건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1-1-5.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신규직종 발굴 및 시범사업 건수 지역별 업종별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사업 참여자 수 직장보육시설 증가 건수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개선 여부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실태조사 실시 여부	여성가족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통계자료
1-2. 사회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성차별개선	
1-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일가정양립 지원 신청자 수 및 해당 기업수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국회입법자료

성과지표	출처 및 산식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모성보호 신청건수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모성보호 이후 고용모니터링 건수	
1-2-2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개선	
공기업경영평가 지표개선 여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배치/승진모니터링 보고 고용개선 미흡 사업장 의무비율 부가 건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1-2-3 기업내 차별개선 모니터링 사업	
성차별구제업무 건수와 유형별 분류건수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1-3. 취약여성 자립지원 강화	
1-3-1 빈곤층 여성 고용-복지 연계 지원	
여성가장/ 한부모 취업지원 통합지원센터 수 취업지원 수혜자 수 빈곤층 여성 대상 고용지원 예산 증가율 다문화/북한이탈 주민 여성대상 고용지원 건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1-3-2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	
농촌지역 여성 취업지원 사업 수 새일센터의 농촌형 프로그램 실시 건수 훈련프로그램 참여자 수/여성농업인 수 여성농업인 경영성공사례 DB 건수 리더십 교육참여자 수/귀농귀촌 여성 수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1-3-3 여성 비정규직 활용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 영세사업장 고용복지기금 설립 유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1-3-4 노동시장 성차별 지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성평등 지표개선 모니터링 센터 설치 여부 성별 임금 모니터링 실적 성평등 지표별 모니터링 실적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1-4. 여성 협동조합 및 창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	
1-4-1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확대	
돌봄영역 협동조합 지원건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1-4-2 여성창업지원 확대	
여성정책자금 지원건수 증가율 민간금융지원 건수 증가율 지식창업 여성지원 건수 1인 창업자 중 여성비중 여성 취약계층 창업지원 건수	중기청 통계자료

2. 공공부문·대외협력의 참여 확대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2-1.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구축	
선출직 의원후보 의무할당건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건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2-2. 공공부문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여성공무원 관리직 교육훈련 건수	행정안전부
여성 관리자 임용건수 및 비율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관리직 여성임원 임용건수 및 비율	행정안전부
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	국공립대 여성 전임교원 수 / 국공립대 전임교원 전수 × 100
2-3.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여성의 통일관련 의사결정과정 참여인원수 및 참여비율	통일부
통일관련 교류협력기구 여성참여건수	통일부
2-4. 국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기구내 여성참여 보장	
성인지적 ODA사업 예산비율	외교통상부

3.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인권 보호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3-1.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후 100점 환산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율	
지자체별 지역연대 사업아이템 사례발굴건수	
초·중등학교 학내 성폭력 건수	전국의 초·중등학교 학내 성폭력 발생 건수
3-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 수혜자 현황	반기 및 연말 실적 보고자료, 가해자 프로그램 수혜자의 합
가정폭력 가해자 인식개선도	반기 및 연말 실적 보고자료, 가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조사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직접 또는 용역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실적	사업운영실적 보고서, 연간 이주여성을 위해 제공한 상담건수
3-3.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자수	성범죄자 알리미 접속통계,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 연간 방문자 총수(365일)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수혜자 현황	반기 및 연말 실적 보고자료, 가해자 프로그램 수혜자의 합
무료법률구조 처리실적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적자료
수혜자 만족도	직접 또는 용역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 당해연도 전년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만족도 평균치
성폭력피해자 지원실적	반기 및 연말 실적보고 통계자료, 상담기관의 성폭력 상담건수의 총계
3-4.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제도개선 실적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관련 지침 및 보고서, 관련 부처 협의사항, 성매매 피해자 보호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수
피해자 보호실적	연말 운영실적 보고자료, 성매매피해상담소의상담건수의 총계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교육수료 후 사회복귀율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결과 보고서, (복학, 취업, 가정귀가, 쉼터연계 등 교육수료자별 사례관리계획수립 후 6개월 이상 지속된 수)/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수료인원
중앙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중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개별사업별 만족도 조사결과와 평균값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양성인원수	사업결과보고서, 종사자 양성교육 참여인원수 집계
3-5. 여성인권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 재정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4.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4-1. 공적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여성 국민연금 가입율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성가입자/ 전체가입자) X 100
4-2.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과 위기개입 강화	
기초보장 여성수급자 자활성공율	보건복지부, (여성자활성공자/ 여성자활사업참여자) X 100 (성별분리통계 없음)
4-3.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성주류화 추진	
여성노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여성참여자 / 전체참여자) X 100
여성장애인 의무고용율	(성별분리통계 없음)
4-4. 여성의 건강권 증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건수	(신설)
10대여성 규칙적 체육활동 실천율	국민생활참여실태조사,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5.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실현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5-1. 보육지원의 체계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분담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X 100
영유아육아지원시설 이용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수/ 0~5세 아동수) X 10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5-2. 각종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및 수요자대응성 강화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사회서비스 인력 이직률	(집계필요)
5-3.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 대상자수	여성가족부 통계
비양육부모 양육비이행율	여성가족부 비정기조사, 향후 정기 실태조사로 대체 (양육비수급한 한부모 수 /양육비지급판결받은 한부모수) X 100
5-4.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반구축	
근로시간단축 홍보를 위한 교육자료배포 근로시간대에 따른 근로형태 발굴건수 근로시간제도 법 개정 단시간근로청구권 건수 증가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유연근로제 실시 공공기관 수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수/근로자수 인사관리매뉴얼 개발 건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공공부문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공공부문 사업장 남성근로자 육아데이 사용건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지역사회 기반 EAP 지원 건수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지자체 지표개선 여부 여성친화도시 선정 기준에 지표반영여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6-1. 여성이 건강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여성건강 위협하는 미디어 및 사회문화 개선 과장의료광고 신고 처리건 수 이력서개선 공공기관 수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실적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중 성형관련 광고에 대한 의식조사 항목 추가 - 위 조사의 소셜커머스 이용현황에 성형 관련 항목 신설 (현재는 '미용'으로 조사)
아동과 청소년의 자존감을 살리는 신체이미지 육성 비만을 및 저체중을 검토 남녀학생 신체활동 격차 프로그램 개설 학교 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여아 안전 활동 공간 지정 증가율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3년주기) 건강부문 (청소년의 식습관, 청소년 운동·비만 등) -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각년도) 중 저체중 학생비율 -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각년도) 중 권장운동량 실천율 - 「청소년 통계」 중 II. 보건 4. 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초·중고 등학생의 비만을 조사 이외에 '과도한 다이어트', '식이장애' 여부 항목 추가
소수자 인권 존중하는 의료인프라 구축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횟수 및 참여자 수 교육과정에 여성인권교육 의무시수 확보여부	
6-2. 차별없는 미디어·문화예술 환경 조성	
미디어생태계 성평등 체감도 향상 공익광고 실시 횟수 신문고 운영 실적 매체 모니터링 실적 및 환류건수 정책연구실적 모니터링지표개발	
성평등 문화를 키우는 미디어 지원 작은 미디어 지원 실적 프로그램 개발 실적 콘텐츠 공모 실시 횟수	
여성연예인 인권보장 관련법제정 표준계약서 채택 증가율 예방교육실시 횟수 및 참여인원 증가율 외국인고용업소 현황 보고 건수	
정보접근성과 정보역량의 격차 완화 정보화교육 실적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실태조사」(매년)중 인터넷 이용현황 부문
6-3. 지속가능한 삶 속의 풀뿌리문화 살리기	
풀뿌리문화 여성활동 지원 협동조합 여성참여 비율 육아공동체 지원 실적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항목 중 19.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성별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지역여성단체 지원 실적	
성평등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 지원 지역운동네트워크 활동 지원 실적 가족참여활동 증폭 및 참여인원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사회조사」(각년도)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조사항목 중 공동체, 사회참여 조사 부분 반영(매5년 실시)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생활시간 조사 변동율 개선활동 실적 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 체험시설 개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기혼남성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요일평균시간/ 기혼여성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요일평균시간 * 100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중 가정생활 부문
성평등한 지역문화 발굴 지원 실적	
6-4.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시도교육청 양성평등 전담인력 배치 비율	양성평등 전담인력 배치 시도교육청 수 / 전체 시도교육청 수 × 100
고등학교 여학생의 교과선택 비율	[교과별] 여학생 선택건수 / 전체 선택 건수 × 100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내 양성평등 강의 설치 건수 및 수강 비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내 양성평등 강의 설치 건수 교육대 및 사범대 양성평등 강의 이수자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 전수 × 100
대학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보육시설 설치 대학 수 / 대학 전수 × 100
여성의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 비율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 여성수 /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수 × 100

7.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의 강화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7-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국가성평등지수 지수변화 (전체 값, 중점 관리지수)	국가성평등지수 값
	중점 관리 영역의 지수 값 (경제활동, 복지, 안전)
부처별 성평등 성과 지표 달성률	부처별 성평등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 평균
7-2. 성인지 정책 도구의 내실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text{정책개선실적 공표 과제수} / \text{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times 100$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권고 반영률	$(\text{정책개선권고 이행 과제수} / \text{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과제수}) \times 100$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 이행률	참여 기관의 성과목표 이행률의 합 / 참여기관 수
여성친화도시 사업 목표 대비 이행률	여성친화도시별 사업 이행률의 합 / 여성친화도시 수
7-3. 성평등 정책 추진 주체 역량강화 및 협력구축	
고위직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실적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교육 참여 시간의 합계 (자료: 정부업무평가 보고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실시 실적 및 교육만족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간 교육실시 인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수료자 만족도 조사 평균값
전문가 양성 교육 실적 및 교육 만족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간 교육실시 인원수
	교육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값
정부·시민단체·전문가 연석회의 개최건수	개최건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만족도	각 선정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7-4.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공감 확대	
성불평등 정책개선 건의 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수	웹페이지 연간 방문자 수
시민공청회 개최 건수	개최 건수
성평등 정책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어플리케이션 총 다운로드 수

부록 3. 정책과제별 주관부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 (activation) 지원	1-1-1 청년층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청
	1-1-2 초기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1-3 40대 중심의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업 개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부
	1-1-4 여성 연소노인 취업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1-5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2 사회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성차별개선	1-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1-2-2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개선	고용노동부
	1-2-3 기업내 차별 개선 모니터링 사업	여성가족부
1-3 취약여성 자립지원 강화	1-3-1 빈곤층 여성 고용·복지 연계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3-2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	농림식품부
	1-3-3 성별 임금격차 축소 등 성평등지표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1-3-4 여성 비정규직 활용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고용노동부
1-4 여성 협동조합 및 창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	1-4-1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1-4-2 여성창업지원 확대	중기청

2. 공공부문·대외협력의 참여 확대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2-1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구축	2-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의석수 확대	행정안전부
	2-1-2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	여성가족부
	2-1-3 성평등한 정치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2-2 공공부문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2-1 여성 공무원 관리직 진출 및 임용목표제 확대	행정안전부
	2-2-2 공공기관 관리직 및 임원비율 제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2-2-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행정안전부
	2-2-4 대학의 여교수 임용 비율 제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2-2-5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여학생 비율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경찰청
2-3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2-3-1 통일 관련 의사결정과정 여성의 참여 보장 및 촉진	통일부
	2-3-2 남북관계 3법 개정	통일부
	2-3-3 남북여성 공동의제발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통일부
	2-3-4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통일부
2-4 국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기구내 여성참여 보장	2-4-1 젠더마커에 의한 개발사업 평가	외교통상부
	2-4-2 국제협력기구내 여성참여 확대	외교통상부
	2-4-3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외교통상부

3.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인권 보호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3-1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3-1-1 지역사회 안전교육 추진	여성가족부
	3-1-2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 강화	여성가족부
	3-1-3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3-1-4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여성가족부
	3-1-5 성희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내실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3-1-6 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여성가족부
	3-1-7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3-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3-2-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내실화	여성가족부
	3-2-2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제도의 집행력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법무부
	3-2-3 가정폭력 피해감소를 위한 사법절차 이전단계에서의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3-3 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3-3-1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내실화	여성가족부
	3-3-2 성폭력가해자 처벌제도의 집행력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법무부
	3-3-3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관련 사후 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3-4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3-4-1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에 대한 단속·처벌의 실질화	법무부
	3-4-2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의 실효성 강화	여성가족부
	3-4-3 청소년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성매매 유형별 대응력 제고	여성가족부
3-5 여성인권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 재정립	3-5-1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3-5-2 여성폭력방지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3-5-3 여성폭력방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여성가족부
	3-5-4 여성폭력방지정책 과정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여성가족부

4.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4-1 공적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4-1-1 국민연금의 여성친화성 강화	보건복지부
	4-1-2 여성의 기초노령연금 및 타공적연금 수급권 확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4-2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과 위기개입 강화	4-2-1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여성친화성 강화	보건복지부
	4-2-2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제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3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3-1 여성노인의 활동적 노후생활 및 취약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4-3-2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3-3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체계 운영	통일부 여성가족부
	4-3-4 여성수용자 인권보호 및 출소자의 자립지원 확대	법무부 여성가족부
4-4 여성의 건강권 증진	4-4-1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4-4-2 모성 및 생식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4-3 여성의 기초체력강화 및 건강회복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5.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실현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5-1 보육지원의 체계화	5-1-1 보육수요에 맞는 전달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5-1-2 보육서비스의 지역격차해소 및 서비스질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5-1-3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5-2 각종 돌봄지원의 사회적 분담 강화	5-2-1 장기요양보험 공급규제 강화 및 질적수준 제고	보건복지부
	5-2-2 돌봄서비스의 관리감독 강화 및 체계적 정보망 구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5-2-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부
5-3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5-3-1 한부모가족지원의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5-3-2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 확대 및 가족문화 개선	여성가족부
	5-3-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구적 정책개발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5-4 일 생활 균형을 위한 기반구축	5-4-1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4-2 유연근로제도의 확산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5-4-3 남성의 육아참여지원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5-4-4 근로자 지원제도의 확산	여성가족부
	5-4-5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제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6-1 여성이 건강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6-1-1 여성건강 위협하는 미디어 및 사회문화 개선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6-1-2 아동 및 청소년의 자존감을 살리는 신체 이미지 육성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6-1-3 의료서비스 인력의 여성인권 감수성 고양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6-2 차별없는 미디어·문화예술 환경 조성	6-2-1 미디어생태계 성평등 체감도 향상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6-2-2 성평등 문화를 키우는 미디어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6-2-3 여성연예인 인권보장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6-2-4 정보 접근성과 정보역량의 격차 완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6-3 지속가능한 삶 속의 풀뿌리문화 살리기	6-3-1 풀뿌리문화 여성 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통계청, 중소기업청
	6-3-2 성평등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6-3-3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인적자원부
	6-3-4 성평등한 지역문화 발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6-4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6-4-1 양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및 성 평등한 학교운영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6-4-2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비한 성 평등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6-4-3 교원의 양성평등 인식 고취를 위한 조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6-4-4 양성평등한 대학 운영 제고 및 대학정보공시에 성별분리 통계 표기	교육과학기술부
	6-4-5 학습 취약 계층을 위한 학습권 보장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7.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의 강화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7-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7-1-1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으로서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7-1-2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7-1-3 중앙과 지역 여성정책 협력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7-1-4 성평등 목표 설정 및 성인지적 정부업무평가 체계 구축	국무총리실
	7-1-5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표 활용도 제고	여성가족부
7-2 성인지 정책 도구의 내실화	7-2-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특성화와 다양화	여성가족부
	7-2-2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7-2-3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및 이행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7-2-4 성인지 정책 도구 간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7-2-5 양질의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체계적 관리	통계청, 각 부처
	7-2-6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통합적 지원기관으로의 발전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7-3 성평등 정책 추진 주체 역량강화 및 협력구축	7-3-1 고위직 공무원의 책무성 강화	여성가족부
	7-3-2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대상 확대 및 특성화	여성가족부
	7-3-3 성인지 교육 및 자문 전문 인력 양성 체계화	여성가족부
	7-3-4 시민단체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
7-4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공감 확대	7-4-1 성평등 정책의 시민 참여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7-4-1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발 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회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병창 (숙대 법학과 교수)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조혜영 (여성신문사 편집국장)



토 론 문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I. 총평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안’은 성평등 통합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와 대표성 확보,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돌봄의 공유와 사회화, 성별 고정관념의 해체 등 네 가지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여덟 가지의 대과제 아래 중과제, 소과제 및 세부과제 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확산, 여성 정책 조정 능력 제고 그리고 지표와 성과관리 등 정책 책무성 강화라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선 여성정책이 취약 계층으로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와 안전한 생활을 보장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러한 확장성이 그 존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의 전체 틀은 비전과 정책 목표 그리고 전략과 정책과제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정책 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II. 제안 사항

1. 경제 주체로서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중과제 중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반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과제 중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제도의 확산이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지 않은 형국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적인 부과보다는 물질적 또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려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1-3-3> 여성 비정규직 활용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성별 비례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적절하나 어느 정도의 성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1-5-3>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방안으로 육아휴직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를 유도함으로써 남성이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구 내의 자유로운 시간 배분에 대한 제약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후생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유능한 여성 인력을 차별하는 고용주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함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세부 과제로서 <2-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의석수 확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여성 정치인의 양적인 확대뿐 만 아니라 훌륭한 여성 정치인의 발굴입니다. 이는 위해 각 정당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3-4>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수요 억제를 위한 적절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동시에 성매매 종사자의 경제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부의 '2007년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종사자는 약 27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차적으로 여성이 성매매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다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동시에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서는 성매매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여성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수단 중 공적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과 위기개입 강화,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 과제에서는 여성 친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대상자의 소득 보장을 추구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취약 계층 중 여성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는 자칫 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보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 크레딧의 확대는 여성을 위한다고 보다는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고, 노인, 장애인, 탈북자 등 각각의 취약계층은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8. <4-4-1> 여성 건강 관련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여성건강마을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 건강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체 국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수행하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5-1> 보육지원의 체계화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보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살핌의 종류가 다릅니다. 영아(만0~2세)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필요로 한 반면, 유아(만3~5세)의 경우 일정 시간 동안의 교육과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의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양육을 지원하고, 유아의 경우 보편적인 기관 교육을 지원하되, 부모의 필요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영아와 유아 가구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0. <5-1-1> 보육수요에 맞는 전달체계 정비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정부지원에 의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민간 시설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요구하는 보육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 <5-3-1> 한부모가족지원의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강화 방안으로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비 이행 강제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 <7-3> 다양한 계층의 여성 학습권 보장 정책은 학업중단 청소년, 유자녀 대학원생, 저학력 저소득 계층 등 각각의 취약 계층 중 여성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성별과 상관없이 필요한 것이므로, 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보편성과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토 론 문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토 론 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문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여성발전기본법’에 기초한 정책수립의 방향
 - 지난 15년의 계획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과 2~3년의 단기적인 계획이 유기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계획 수립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책관련 법령이므로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지나치게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통계나 자료와 그 분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뒤따를 때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됨(예를 들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자체적 분석을 하지 않고 있음. 신생아 출생수나 출산율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
 - 5년이란 기간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계획한 기간 동안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속적 후속조치가 필요할 터인데 정책과제만 지나치게 나열되어 있고, 그 정책들의 기간내 실현 가능성, 기간내 실현되지 못할 경우(목표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현실적인 후속계획이 없이 1차, 2차, 3차 하는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이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독립적으로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따로 논의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보임)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정책의 대주제만 8가지이고, 그 세부적인 과제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정책주제만 잡화점식으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을 몇 가지 정도로 압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수립과 계획목표를 이루기까지의 현실적인 로드맵 작성

- 지난 15년의 과제와 성과를 비교해 볼 때, 수립계획이 목표를 이루거나 근접한 정책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다면 그 다음 계획은 기본계획을 위한 계획에 불과한 것임.
- 정책이란 결국 국민이나 관련자들이 그에 대해 공감할 때 보다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이나 정책을 몇몇 전문가나 행정담당자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그에 대해 충분히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의 달성에 직접적인 정책과 우회적(간접적)인 정책

- 완벽한 독재국가가 아닌 한 정책을 수립되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소요될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계획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해당 정책이 가장 밀접한 세대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면, 남성의 가사일 부담의 경우,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므로, 혼인하기 이전의 남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큰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나무가 싹싹 자라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그 나무가 충분히 자라서 재목으로 쓰여질 때까지 키우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정책이 되어야 함)
- 정책의 실현이 정부나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관련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목표를 구분하고, 5년, 10년, 30년 등 실제로 목표달성에 이루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른바 전문가 그룹의 주장과 목표의 현실성

- 요즘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홍수같은

대책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그 다음 과정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자기만의 ‘장밋빛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 것인가.

- 이러한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많은 관련자들은 환호하고 기대할 것이나, 그것이 현실화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나 관련기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봉책에 그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될 것임.
- 정말 필요한 정책의 수립과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연구 논문(이것은 그들 몇 사람과 관련자만이 볼 뿐이고, 일반인들은 그 결과를 하루라도 빨리 이뤄주길 기대하지 않는가)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하여야 함.
- 어제 뉴스에 국무총리가 ‘무상급식, 의료, 반값등록금은 한꺼번에 이행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세 분야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주머니 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지 누구나 세 가지 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정책이란 실현가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임. 그러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토 론 문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점검과 평가

이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설립하는 상황에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간단하게 기술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1) 계획수립시 사회환경과 관련하여 제대로 마련된 계획이었는지를 판단, 2) 실행하기로 한 계획이 실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3) 실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가 그 이유를 묻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는지, 4) 각 부처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실행되지 않은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괄적으로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또한 어떻게 점검해 나가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며 책임을 묻는 기제를 확립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 향후 환경진단

- 현재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중도에 설수가 없는 상황이며, 많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이 너무 힘든 노동이 되지 않도록 강도를 낮추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 '지속가능한 노동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일가정양립의 핵심 정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이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시간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총 노동시간을 염두에 두고 일자리 배분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지 여성을 위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반위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논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충분한 지지와 연대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정부차원의 성별영향평가분석의 양적 팽창을 넘어서 어떤 시스템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5년간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현재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도전받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변화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까이다.

□ 젠더와 건강권

- 젠더건강을 이야기할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만 보는 단순주의나 모든 것을 여성과 남성으로 귀속시키는 환원주의는 지양하고, 젠더와 다른 건강관련 요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업은 특히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젠더건강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만 귀속하는 논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논의와 국가 차원의 정보생산을 통해 가능하다.
- 여성건강/젠더건강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학계, NGO가 모여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장이 마련되어 여성건강/젠더건강의 아젠다로 무엇을 시급히 올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여성건강/젠더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관점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성, 남성 모두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젠더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치료나 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건강정책과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타의 사회정책과의 연대도 향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되었던 여성건강 및 젠더 건강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이 영역이 생략되었지만 현재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사례로 부각되어야 한다.

-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건강/젠더건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성건강/젠더건강에 대한 비전 마련, 정책의 우선순위 정하기, 전략적 방향 잡기 등이 논의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실행의 구체적 지표는 예산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의 방안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캐나다, 호주의 경우는 독립적인 여성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건강센터 운영의 장점과 단점, 기존 건강기관의 성주류화 방향 등이 논의되어 여성과 남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차원의 젠더건강관련 정보생산은 젠더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건강의 장기적인 비전, 전략, 우선순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지표가 젠더건강과 관련하여 추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독립적인 젠더건강 관련 지표가 있어야 하는지, 만약 독립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면 기존 건강자료와 어떻게 함께 생산,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정책이나 사업을 정부부처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들이 건강정책을 조정, 실행, 평가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실행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전담조직이나 실행부처가 없이 정책 및 사업이 실행될 수 없고, 젠더건강 조직이 부처에서 주변

화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건강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젠더와 건강문제를 연구하는 전담기관 설립 또는 실행기관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해 통계 및 각 종 자료 및 정보가 생산되어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 한편 보건분야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편성을 제대로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체계로 나가야 한다. 국가정책에서 지역사회의 보건소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분석이 이루어져 여성건강/젠더건강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근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분야 R & D 사업에 대한 성분석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위간부직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공무원 특히 간부급의 보건분야 특화된 성분석 교육과 보건인력개발원에서도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논의의 과정에서 여성건강/젠더건강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시범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성과 남성이 참여하여 역량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
- 정책과 전략수행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 및 보건관련 인력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젠더와 건강에 관한 교과목을 마련하고, 젠더와 건강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학교(특히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기관에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보건인력연수과정에 '젠더와 건강'과목을 포함하여 의료적 접근과 사회환경적 접근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건강 관련한 교과목 개설이나 담당 인력의 양성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모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비전과 전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지 및 건강권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과 고령화, 산재보험의 기본 골격이 전통적인 제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산재보험의 신청, 승인에 대해 산업별,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결과가 공표되어 현실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운영이 다양한 산업,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연구 및 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돌봄노동 및 서비스직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일반적인 여성건강/젠더건강과 결코 떨어져서 논의, 실행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음식, 미용업 등)에서 일하거나, 가정에서 여성이 노동을 수행하거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집단(돌봄노동자)에 대한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보건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혁하고, 지역사회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자하여 서울지역 전역에 확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눈여겨 볼만하다.



토 론 문

조혜영 (여성신문사 편집국장)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

-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의 금지 및 적극적 고용조치의 시행,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금지법 등 법·제도의 측면에서 성과.
- 성평등 가치 추구로 정책 전반에 걸쳐 젠더합의를 찾고, 성주류화 전략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활용,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력개발 및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여성정책의 외연이 확대됨.
- ‘경력단절 여성’, ‘일가정양립’, ‘돌봄’, ‘여성친화도시’ 등 여성노동, 일자리, 안전, 여성정책거버넌스 인식 확산.

□ 시대적 과제와 제4차 여성정책과제

- 성평등 통합사회의 비전
 - 복지국가전략은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짐. 국가계획으로서의 여성정책 마스터플랜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 정책 전반에 성인지, 성주류화, 성인지 예산이 정착,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함.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마련 기대.

○ 여성 노동·일자리

- 인구구조의 변화로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 여성빈곤, 여성비정규직, 돌봄노동 등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함. 생애전반에 걸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 맞춤형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생활밀착형 성평등 정책

- 성별 고정관념의 해체를 위해서는 젠더정책 파트너로서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이슈 개발뿐만 아니라 삶속에 녹아있는 성평등 문화·교육이 중요. 일·생활 균형 정책도 삶의 문제로 남성과 여성이 따로 없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과 교육·문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성평등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 복지국가를 넘어선 국가이념에 성평등이념이 우선시 되어야함. 여성정책은 이를 위한 기반임.
-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위상과 정체성을 높이고 젠더파트너로서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이슈 개발은 진일보한 여성정책임을 시사.